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증진을 주제로 주한 외국대사관, 국제기구, 정부 기관, 북한인권 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40명이 참석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5년 유엔이 모든 당사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평화정착과 북한인권 증진을 모색한 국내 최초의 국제행사로 국내.외에 새로운 형태의 북한인권 개선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 및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SDGs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사회권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이 SDGs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SDGs가 북한의 절실한 개발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보편성 및 비차별 인권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시각과 방안은 대북개발협력 국제전문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정부 북한업무 담당자, 북한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북한인권 관련 NGO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14개국의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였고, 통일부는 이 행사 직후 참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사업방향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통일연구원, 대학교수, NGO 활동가 등 많은 관계자들이 자료집 송부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향후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SDGs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협력방안을 국내에서 공유.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아시아지역 등에서 북한이 참여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인권증진을 위한 대화 및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권 NGO 소식	유엔 소식
<p>휴먼라이츠워치,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를 위한 일본의 법개정 촉구</p> <p>최근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아웃팅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을 당하고 조롱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진행자가 ‘특이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된 에피소드에서 진행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정체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밝히고 그를 ‘특이’하다고 규정했다. 이후 방송사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p> <p>공개적 사과가 이루어진 것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 법개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권리도 동등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 <p>일본에서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려면 관련법 (Gender Identity Disorder Act)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미혼이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정체성 장애” 판단을 받기 위한 정신과 진료 및 불임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차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혐오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p> <p>2019년 1월, 일본의 대법원은 불임수술 규정이 일본 헌법에 합치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두 명의 재판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 <p>유엔 전문가들과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는 일본이 법을 개정하고 차별적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p> <p>http://www.hrw.org/news/2019/11/21/outcry-japanese-tv-show-mocks-transgender-woman</p>	<p>유엔 총회, 대한민국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p> <p>2019년 10월 17일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4개 국가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하였다. 선출된 국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p> <p>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3월 유엔 총회에 의해 인권문제 전담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총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한 지리적 분포를 위해 이사회 회원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13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3개국, 동유럽에서 6개국,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서 8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에서 7개국을 선출한다.</p> <p>총회 회원국들은 후보국가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 자발적 공약을 고려하여 투표한다. 인권이사회 회원국은 인권이사회 설립 당시 채택되었던 결의안 60/251에 따라 엄격한 인권기준을 준수할 책임을 갖게 된다.</p> <p>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2019년 2월 8일자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인권분야에 대한 자발적 공약을 제시했다.</p> <p>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국내 인권상황의 진전에 따라 유엔 인권협약을 추가로 비준하고 유보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가입 가능성 검토,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의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성 검토,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및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유보조항 철회,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의 비준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p> <p>http://www.un.org/press/en/2019/ga12204.doc.htm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Membership.aspx</p> <p>*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구술서는 불임자료 참고</p>

기 획 특 집	행 사 일 정												
<p>APF 회원기구들의 2018-2019 주요사업- 카타르, 몽골 국가인권기구</p> <p>2019년 9월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서 각 회원기구들은 2018-2019년도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p> <p>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는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Qatar) 2018-2019년도에 윤리적 인력고용제도 수립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p> <p>카타르 정부는 카타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외에 인력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윤리적 방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임시노동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또한 유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안을 검토하고 정치적 망명자에 관한 법의 도입과 같은 권고를 제시하였다.</p> <p>몽골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법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내 국가고문예방기구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설립, 투명한 위원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다.</p> <p>또한 몽골 내 여성 목부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생식건강권 및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2020년 연간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p> <p>최근 몽골 정치인 암살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관할당국에 해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p> <p>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p>	<p>강제실종협약 가입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p> <p>강제실종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강제실종은 이미 1978년 유엔 총회에서 실종자들(Disappeared Persons)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UN인권위원회는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2년 UN총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제실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강제실종 범죄의 실제적인 내용 규정, 강제실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협약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우리 위원회는 2008년 강제실종협약 가입 권고에 이어 2017년에 가입을 재권고하였고 2018년 법무부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여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p> <p>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019. 12. 12.(목), 15:00 ~ 17:00 - 장소 : 위원회 배움터(10층)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p>2019년 11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p> <table border="1" data-bbox="817 1594 1331 1944"> <thead> <tr> <th>날짜</th> <th>회의</th> </tr> </thead> <tbody> <tr> <td>11/4-11/15</td> <td>세계인권검토 (UPR) 실무그룹 제34차 회기</td> </tr> <tr> <td>11/11-12/6</td> <td>고문방지위원회 제68차 회기</td> </tr> <tr> <td>11/18-11/22</td> <td>고문방지소위원회 제39차 회기</td> </tr> <tr> <td>11/18-11/22</td> <td>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제86차 회기</td> </tr> <tr> <td>11/25-11/27</td> <td>제8회 기업과 인권 포럼</td> </tr> </tbody> </table>	날짜	회의	11/4-11/15	세계인권검토 (UPR) 실무그룹 제34차 회기	11/11-12/6	고문방지위원회 제68차 회기	11/18-11/22	고문방지소위원회 제39차 회기	11/18-11/22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제86차 회기	11/25-11/27	제8회 기업과 인권 포럼
날짜	회의												
11/4-11/15	세계인권검토 (UPR) 실무그룹 제34차 회기												
11/11-12/6	고문방지위원회 제68차 회기												
11/18-11/22	고문방지소위원회 제39차 회기												
11/18-11/22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제86차 회기												
11/25-11/27	제8회 기업과 인권 포럼												